

광주시·산하기관 비정규직 없앤다

임기 내 838명 모두 정규직 전환... 무기계약직은 공무원으로

윤장현 시장 광주일보 인터뷰

서민 복지 향상을 기치로 내건 윤장현 광주시장이 오는 2018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공무원을 전원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6일 광주일보와의 취임 100일 인터뷰에서 “민선 6기 임기 내에 시와 시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비정규직을 모두 정규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윤 시장은 또 “정규직화돼 있으나 급여 및 복지 수준은 비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새 직제인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관리규정도 일부 손질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비정규직 공무원들의 임금이 정규직이나 일반 기업의 직원들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실질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 시장은 “시장 취임 전부터 시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깊이 고민해 왔고, 그동안 여러 안을 놓고 검토해왔다”면서 “비정규직 뿐만 아니라 시와 산하기관에서 용역업체의 파견형태로 근무중인 청소노동자 등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고민중에 있다”고 말했다.

시 산하 공사·공단 4곳에는 모두 568명의 비정규직이 고용불안과 열악한 임금, 복지 속에 근무하고 있으며, 그의 출자·출연기관에도 270명의 비정규직이 있다. 시 산하 조직 내 비정규직만 총 838명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더라도 고용불안만 해소될 뿐 급여·복지 등의 수준은 비



정규직과 비슷해 무기계약직의 실질적인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와 관련해 윤 시장은 “최근 무기계약직 노조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했다”면서 “인사부서에 무기계약직의 근무조건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만큼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시장은 다만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고,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면서 “무기계약직의 첫 번째 건의사항인 명칭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일부터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무기계약직이란 명칭은 조직 직제에도 없는 것으로, 정원 외로 분류돼 조직 정원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민원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업무연수 등 각종 혜택은 일반직이나 기능직에게 모두 빼앗기는 등의 푸대접을 받고 있다. 특히 기본급은 20년을 근무해도 단 14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치는 등 임금과 복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윤 시장은 “시 조직은 물론 광주 공동체 내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의 실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시 조직은 물론 광주 공동체 내에서 차별받는 일을 최소화하는 한편 서민의 실질 생활에 보탬이 되는 행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을이 익어가는 ‘황금 들녘’

결실의 계절인 10월, 황금 물결 넘실대는 들녘은 풍요롭다. 6일 광주 서구 서창동 들녘에서 한 농부가 본격적인 수확철을 앞두고 누렇게 익은 벼를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Made in 광주 ‘쏘울’ 전 세계 100만대 판매



‘포프모빌’ 효과 유럽 인기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효자 수출 차종인 ‘쏘울’이 전 세계 100만대 판매를 눈앞에 두고 있다.

6월 기아차에 따르면 쏘울은 지난 2008년 9월 출시된 뒤 지난달까지 6년 동안 전 세계 누적 판매 99만대를 돌파했다. 올해 들어 매일 1만9000여대가 판매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달 중순 1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자동차 업계는 세단이 아닌 박스카 형태의 쏘울이 단기간에 100만대를 돌파한 것을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2009년부터 본격 판매된 쏘울은 연간 전 세계 판매 10만대를 돌파했으며 2011년엔 17만7864대가 팔리며 연간 최대 실적을 거뒀다. 지난해 신형 모델이 출시된 뒤 성장세도 가팔라졌다. 올 1~9월 판매실적은 17만1119대로, 이미 지난해 16만4420대를 뛰어넘었으며 올해 말엔 2011년의 최대 판매 실적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쏘울의 주요 시장은 단연 북미다. 2009년 이후 미국에서 55만여대가 팔렸으며 이는 전 세계 물량 중 56%를 차지한다. 최근 방한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포프모빌’로 이용한 덕분에 가톨릭 신자가 많은 유럽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어 유럽 판매도 확대될 전망이다. 쏘울은 기아차 광주공장에서만 전량 생산되는 차종으로, 광주공장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쏘울은 기아차 디자인의 ‘아이콘’이라며 “액센트와 아반떼, 프라이드에 이어 현대·기아차 미국 수출 차종 가운데 4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동룡기자 lexian@kwangju.co.kr

조대부고 총동창회 친선 체육대회

먹는 것 산이거든 무느곤 못 가리!

- 일시: 2014. 10. 19(일) 09:30
- 장소: 모교운동장
- 전화: 062-224-146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총동창회장 이민수

‘세월호 참사’ 399명 형사 처벌

대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중측·과적·조타미숙이 원인

29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을 물어 모두 113명이 입건되고 61명이 구속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업계의 구조적 비리도 이어진 수사까지 확대해서 모두 399명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검찰은 특히 해양경찰이 제대로 된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해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해상 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해경이 구조 활동을 잘못해 형사 처벌되는 미증유의 사례를 남기게 됐다.

대검찰청은 6일 세월호 침몰 참사와 관련, 정해진 해운의 무리한 중·과적으로 복원성이 약화된 상태에서 선원들의 조타미

숙과 부실한 화물 고박 등이 맞물려 침몰로 이어지게 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6월 시작된 세월호 선원 및 정해진 해운 관계자들의 재판이 선고를 앞두고 있는 등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태껏 나온 수사 내용을 포함하고 제기됐던 여러 의혹까지 종합해 사실상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 뒤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 의무 위반 책임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 행위 ▲선사인 정해진해운 실소유주인 유병연(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해운업계의 전반적·구조적 비리 등을 중심으로 전방위 수사에 나서 399명을 입건하고 이중 154명을 구속했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어 입건된 인원만 선장·선원(15명), 정해진해운 임직원(7명) 외 하역업체, 운항관리자, 구명뗏목 점검업체 등 안전·감독기관 관계자 등 113명으로, 61명이 구속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학교설립 60주년 기념 선교대회

일시: 10월19일(주일) ~ 22일(수요일)
장소: 광신대학교, 광주신일교회
문의: 062)605-1000

광신대학교

공적연금복원은 국민 노후의 삶을 복원 시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제멋대로 남용되고 낭비되고, 국민 여러분의 연금이 改惡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권력들의 선심성, 전시행정 사업에 귀한 세금을 낭비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불분명한 해외자원개발에 마구 퍼부어 수익은커녕 원금마저 날려버릴 때도, 국민 여러분의 땅과 세금으로 키워진 알짜배기 공적 자산들이 소위 투자유치나 ‘민영화’라는 미명하에 대재벌과 투기자본들의 손아귀에 헐값에 넘겨지고, ‘민자유치’라는 이름의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타리 사업에 세금 퍼주기가 공공연히 벌어질 때도 침묵만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연금이 환율방어, 주식시장 방어에 마구 퍼부어지면서 수익을 늘리는커녕 투기자본과 대기업들의 배만 불리면서 막대한 손실이 생기는데도 방관만 했습니다.

결국, 이 땅에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너무도 무능했고, 너무도 무책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국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탱한 것이 재벌입니까? 누구를 위한 정부입니까?

“답뻣값, 자동차세, 주민세” 같은 서민세금은 마구 올리면서 부자감세로 벌어들인 “전문학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철저히 모른 채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국민에게서 받고, 혜택은 기업에게 주고, 책임과 비난은 국정운영 현장 최일선에서 굶은일을 도맡아 하는 공무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0대 재벌기업 유보금 470조”
“4대 재벌 자산 = 국가 총자산의 1/4”
“30대 재벌 자산 = 국가 총자산의 1/3”
“노인 자살률 세계 1위”
“비정규직 노동자 600만”
“청년실업자 100만”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세제와 정부재정을 개혁하고 국민연금을 정상화해야 합니다.

연금 적자의 진짜 원인은 정부의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과 방만한 세금낭비에 있습니다.

국가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는 안전하고 안정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복지 실현에 있고, 복지의 핵심은 연금이며, 연금의 원천은 국민들의 임금과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든, 모든 연금에 세금이 소요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받는 연간 수십조의 연금은 대부분 일상생활에서 소비되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자영업, 내수경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은 단순소비성 지출이나 일방적 세금 퍼주기기가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리고, 고용을 촉진하며, 세수를 증가시키는 진정한 공적자금이고 국가경제와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는 최상의 투자인 것입니다.

이런 공적연금에 적자가 생긴 원인은 정부의 주장처럼 복지지출이나 노령층이 많아져서가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이고 더 큰 문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 재벌과 고소득층에게는 과격적인 감세 혜택을 준 반면에 소득이 낮은 서민들만 쥐어짜는 거꾸로 가는 세금정책에 있고, 그렇게 걷은 세금조차 써야 할 곳에 알뜰하게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낭비하여 사상 최대의 국가재정적자를 초래한 정부의 잘못 때문입니다.